"호남권 잡월드 교육청·지자체 상생방안 마련을"

광주YMCA 토론회 이용교 광주대 교수 주장

"접근성이 중요 … 호남 중심인 광주가 최적지"

직업체험교육센터인 '잡월드' 유치전이 뜨겁다. 광주·전남교육청이 핵심 교육 현안 중 하나로 '호남권 잡월드' 유치를 내세우며 경쟁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유치 토론회'로 거들고 나섰다.

광주YMCA는 31일 오후 광주YMCA 무진관에서 '호남권 잡월드,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긴급현안토론회를 열고 유치 필요성·당위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호남권 잡월드' 유치 공모를 앞두고 최적 입지 선정의 원칙을 마련하고 지역상생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여론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특히 YMCA가 광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데다, 수많은 지역 현안 가운데 직접 토론회까지 주관하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례가 그동안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토론회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관심도 적지 않았다.

광주 YMCA 안평환 사무총장은 "YMCA는 다양한 청소년 진로 및 직업계발활동을 꾸준히 펼쳐왔고 '잡월드'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었다"고 언급한 뒤 "청소년 직업·진로 체험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민들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 발제에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이날 발제에 나서 "광주지역 진로직업체험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중심인 광주에 호남권 잡월드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체험보다 견학·관람 중심의 진로직업체험활동 ▲소규모에 체험활동 제공 횟수 미미 ▲체험 공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광주지역 학생들이 최소 6개월~1년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성남 잡월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광주 잡월드'가 설립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또 ▲접근성으로 인한 안정적 이용객 확보 ▲빛고을 시민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향후 영남권·충청권 잡월드 확대로 인한 중복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도 광주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광주·전남의 유치 경쟁을 감안,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광주·전남·북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위치할 때 효과적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논리보다는 잠재적 경쟁기관간 끊임없이 소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2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에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직업체험관으로, 개관 이후 청소년·학부모·교사 등 340만명이 다녀가는 필수 체험관으로 자리잡았다.

호남권 잡월드는 국비와 시비 등 500억여원이 투입되며 진로 직업체험존과 진로설계존 등 직업체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까지 공모를 받아 서류심사(6~7일)·현장실사(8일)를 거쳐 9일 대상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YMCA가 31일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개최한 '호남권 잡월드 어디로 가야하나' 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유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빛고을생활권행정협 '車 100만대 사업' 힘 모은다

남도 관광자원 홍보물·홍보 간판 공동 제작 합의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인접 전남 5개 시·군이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31일 전남 담양군 죽녹원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인근 시·군민들도 고루 혜택을 보게 된다"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단체장들은 또 남도 관광자원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함께 활용하고 외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서울 용산역과 수서역 등에 홍보 간판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협의회가 남도의 포근함과 따뜻한 정을 담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히 대선 공약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협의하자"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광주호 주변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등 가사문학·사림문화는 훌륭한 관광자원"이라며 "20~30년이 걸리더라도 15~16세기 당시 원형을 복원하는 문화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신규협력 과제로 ▲광주 순환고속도로(제3순환선) 건설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 ▲지방도 825선 시설개량사업 ▲KTX 장성역(광주역) 정차 등 4건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 ▲풍류 남도 나들이 사업 등 선도사업 4건 ▲다정다감 남도여행, 빛가람 문화예술아카데미 등 자체 협력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중인 12건에 대한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또한, 광주 연구개발 특구에 화순백신 특구까지 확대해 지정하는 방안은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 혁신산단, 광주 도시첨단산단을 지난 6월 광주·전남이 함께 미래부에 신청한 만큼 협력 안건에서 제외했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한 '지역행복 생활권 운영체계 평가'에서 '빛고을 중추 도시생활권'은 지난해에 이어 우수 생활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수공무원 특별 승진·승급 등

광주시, 규제개혁인센티브 확대

광주시는 지난 3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시의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발표한 인센티브 확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성적 실적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재정인센티브로 우수 자치구 선정 포상과 재정지원,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대통령도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조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해 유공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광주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말 많고 탈 많은' 자문관제 손질

4명 재위촉 않고 분야도 줄여

광주시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정책자문관에 대해 재위촉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임기를 마친 자문관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자문관은 대외협력, 민자도로, 비전·투자 등 13개 분야에 13명이다. 이 가운데 최근 임기(1년)가 만료한 비전·투자, 민자도로, 관광, 혁신도시 분야 자문관 4명은 재위촉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13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민자도로 분야는 제2순환도로 소송 등에 대비해 위촉한 분야로, 그 역할과 임무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또한 일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투자·비전 분야의 김모 자문관은 재위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문관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이달 말로 임기 종료한 교육과 교통, 도시농업 분야는 재위촉했다. 9월 중 임기가 도래한 통일과 문화분야도 필요성이 인정돼 재위촉할 방침이다.

자문관제는 민선 5기에서는 운영되지 않았고 민선 4기에는 고작 4명에 불과했지만 민선 6기 들어 파격적으로 늘었다.

광주시가 시청 안팎의 여론과는 달리 자문관제에 너무 집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훈령까지 바꿔가며 공무원 자료 협조 규정을 추가하고 실효성 논란에도 민선 6기 출범 이후 8000여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청사 내에 4000여만원을 들여 상주공간(46㎡)을 마련하고 600만원이 넘는 TV 세트 등 호화로운 비품을 지원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논란에 따라 자문관 역할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사무실 폐쇄 등을 놓고 의원 간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책자문관 제도는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 훈령으로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여성농업인 지원단' 운영한다

권익향상 지원·애로 청취

전남도가 '여성농업인 지원단'을 개설, 여성농업인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1일부터 도청 농림축산식품국 내에 여성농업인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 25일 한여농 전남도대회에 참석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도청 농림축산식품국 안에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여성농업인 지원단은 도청 농림축산식품국 내 5개과와 농업기술원을 포함, 농업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과별 팀장 1명과 실무자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각 분야별 여성농업인 전문상담과 신규시책 발굴 및 대안 마련으로 양성평등, 지역역할강화, 직업역량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에 앞장서게 된다. 또 분기별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고 협업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 지원단은 여성농업인과의 소통 창구로서 애로사항을 함께 공감하고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전남 농업 육성에 기여할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日,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엔 송금 … 정대협 등 반발

일본 정부가 지난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108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과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날 재단 계좌로 10억엔을 보내는 송금 조치를 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조치는 한일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관련 기술적 절차상 송금 시점으로부터 입금이 확인되기까지는 통상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각의 결정을 통해 10억엔 출연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지 1주일 만에 송금 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이 해야 할 핵심 이행조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일본의 10억엔 송금조치가 이뤄지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대협과 나눔의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민간이 주축이 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31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정부의 '12·28 합의' 강행을 성토했다. /연합뉴스